

노동절에 그려보는 진짜 대한민국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5월 1일 노동절, 매년 이맘때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포스터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근로자의 날 홍보 포스터다. 포스터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노동자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 종사자, 요리사, 소방관, 농업인, 택배기사 등 다양한 직업인이 등장한다. 이 게시물이 늘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포스터 아래 달린 촌철살인 코멘트 덕분이다.

“다 안 쉬는 직종. 포스터 만든 기관도 못 쉬.”

노동을 기뻐한다면서 정작 그 ‘노동’이 쉬지 못하는 현실. 이 간극이야말로 오늘날 노동절의 민낯이다. 필자가 수습 노무사로 노무법인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일하던 시절, 노동권 수호자가 된양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각기 다른 노무법인으로 흩어졌던 동기 노무사들은 ‘노무법인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자문사의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고, 적정임금을 설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근로조건은 챙길 틈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치 영역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두 집단을 만났는데, 하나는 정당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인력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론인들이다. 노동정책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정작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 52시간제와 주 4일제를 외치는 의원 뒤에서, 시간외수당도 연차휴가도 챙기지 못하는 보좌진. 이들의 현실에서, 진정한 노동정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언론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이, 정작 본인이 겪는 부당한 처우에는 침묵할 수 밖에 없다.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눈감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처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제도 밖에 있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일하는 중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공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해고의 제한도, 연차

휴가도 없다. 헌법은 평등을 말하지만, 노동법은 그 평등에서 일부를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노동자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수고용직이든, 플랫폼 노동자든, 모두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구성원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최소한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은 그 상식의 출발점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터에서 사라진다. 하나는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충분한 지원 없이 조용히 배제당하는 방식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현장의 전환은 고용 안정도, 재교육도 없이 노동자의 퇴장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안전장치조차 없는 작업 환경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방식이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 결국 노동자는 미래에서도, 현재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 없는 성장, 권리 없는 일터, 씬 없는 생존, 책임 없는 소멸. 부조리한 일상이 반복되는 한, 진짜 대한민국은 쉬이 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려야 한다. 노동하는 모두가 존엄한, 진짜 대한민국을.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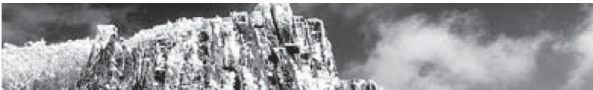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시민들이 베트남전 종전 50주년 기념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스크린 쿼터가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난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덕수 본부장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다. 스크린 쿼터는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자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스크린 쿼터를 줄이는 것은 한국 영화산업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한국 영화 말살에 경제 관료가 앞장서고 있다’는 등 영화계의 원성도 높았다. 하지만 영화계의 반발에도 논란의 한 가운데 섰던 스크린 쿼터는 한덕수 본부장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한 2006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다. 통상을 책임졌던 한 본부장도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경제 관료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론자다. 규제 완화와 자율 경쟁도 강조했다. 통상본부장 시절, 그는 한미통상협정을 주도하면서 가장 먼저 스크린 쿼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1999년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을 주도했다. 한미투자협정도 적극 추진했다. 2005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시장 친화적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역대 정권을 거치며 주미 대사와 무역협회장,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이력도 화려하다.



지난 달 24일 이해진이 쓴 ‘지금 한덕수’는 한덕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탐색이다. 그는 ‘8년 사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어야 했던 상황에서 이전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닌 시스템을 복원해야 하고 그 책임자가 한덕수’라고 주장한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정치적 소음의 감소’라는 말도 이색적이다. 경제 관료로서 무미건조함 때문인지, 탁월한 지도력 때문인지는 이 작가에게 의미 없는 구분일 뿐인 것 같다.

한덕수 대행이 1일 사퇴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걷겠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5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세의 달인’으로 불렸다. 주미 한국대사와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공직생활도 누구보다 화려했다. 반면 ‘허상’이라거나 소신보다 정권에 자신을 맞춰온 ‘관료형 인사’라는 흑평도 나온다. 무미건조한 경제관료일까, 아니면 탁월한 지도자일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개헌 전선’에 뛰어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그리고 한 대행의 사퇴까지. 게임이 끝난 줄 알았던 2025년 대선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게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의대 유급시한 종료, 누굴 위한 선택인가

학칙 개정 등 후속 조치 나서야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다수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종료됐다. 각 대학도 4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명단을 확정했다고 한다.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어렵게 만들어낸 대안을 외면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의과대학의 현실이 안타깝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4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명단을 확정하고 유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모집인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환원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문 상황에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는 24·25·26학번이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도 불가피해 졌다. 각 대학도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한다고 한다. 의대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렸던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대 교육의 파행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 수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오는 7일 교육부 취합 결과에 따라 대다수 대학이 대규모 유급 대책을 확정 지을 경우 25학번 대부분이 유급 처리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을 넘어선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 내년에만 최대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유급 복귀생까지 대거 포함될 경우, 강의실, 실습기기, 교수 인력, 평가 체계 등 교육 전반에 구조적 과부하로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와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하고 편·입학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료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대책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혼돈을 몰고온 의대생들의 유급,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지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大法 파기 환송, 대선 후폭풍 최소화 되길

극심한 진영 갈등 더 이상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에는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불러올 후폭풍이 걱정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이 후보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미칠 정치·사회적 격랑이다. 극심한 진영갈 갈등을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민주당은 선고 직후 ‘대법원의 대선 개입’,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재판 계속 여부를 놓고 국가적 혼란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정치논리나 대선일정 등에서 벗어나 법리에 따라 신속히 판결해 후폭풍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자기관리에 더 엄격해야 한다. 특히 이 후보는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 후보지만 잦은 구설에 시달려 왔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평소 언행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